

## 제251호 (2010. 3. 22)

---

### ■ 건설 경기

- 1월 국내 건설수주 6.6조원 기록

### ■ 정책·경영

- 건설산업선진화방안 1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
- 건설산업-국부 형성에 최대 기여 산업

### ■ 정보 마당

- “세계 건설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 수립 필요”

### ■ 연구원 소식

### ■ 건설 논단 : 운(運)을 잘 관리하면 약(藥)이 된다

# 1월 국내 건설수주, 6.6조원 기록

- 민간건축 수주 증가 영향, 전년 동월 대비 17.1% 증가 -

- 1월 국내 건설수주는 공공수주가 감소했지만, 민간수주가 작년 기저효과와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17.1% 증가한 6조 6,426억원을 기록함.

## ■ 공공부문, 작년 1월보다 부진하나 평년 이상 실적 기록

- 공공수주는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을 조기 집행했던 작년 1월보다 14.7% 감소한 2조 2,859억원을 기록함. 그러나 수주액 자체는 2008년 이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양호함.
  - 공공토목 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19.1% 감소한 1조 6,639억원을 기록. 비록 두 자릿수 이상 감소율이지만, 1월 수주로는 2009년 1월을 제외하고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임.
  - 공공건축 수주는 비주거용 건축수주가 전년 동월 대비 23.9% 증가했으나 주거용 건축수주가 부진해 전년 동월 대비 0.2% 감소한 6,220억원을 기록함.
  - 1월 공공주택 수주 금액은 3,095억원으로 2008년 1월과 2009년 1월(각각 1조 1,921억원과 3,710억원)과 비교하면 부진한 실적임. 그러나, 2008년 이전 각 연도 1월과 비교하면 양호한 실적임.

## ■ 민간부문, 경기도 중심으로 주택 및 비주택 수주 크게 증가

- 민간부문의 경우 토목수주가 부진했으나 건축수주가 큰 호조를 보여 전년 동월 대비 49.4% 증가한 4조 735억원을 기록함.
  - 민간토목 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1.6% 감소한 2,033억원에 그침.
  - 민간건축 수주는 주택수주와 비주택 수주가 모두 호조(각각 +29.0%, +115.3%)를 보여 전년 동월 대비 53.5% 증가한 3조 8,703억원을 기록함.

### 〈2010년 1월 건설 수주〉

(단위 : 십억원, 전년 동기비 %)

구 분	총계	공공					민간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2009. 1월	5,673.7	2,678.8	2,055.6	623.2	371.0	252.2	2,727.3	206.7	2,520.6	1,804.4	716.1
2010. 1월	6,642.6	2,285.9	1,663.9	622.0	309.5	312.4	4,073.5	203.3	3,870.3	2,328.6	1,541.6
증감률	17.1	-14.7	-19.1	-0.2	-16.6	23.9	49.4	-1.6	53.5	29.0	115.3

자료 : 통계청

- 민간주택 수주는 2조 3,286억원으로 평년보다 높은 수주액을 기록했는데 경기도 지역에서만 대략 1조 5,000억원 규모의 수주가 발생함.
- 민간비주택 수주의 경우 인천과 경기도 지역에서 신규빌딩 수주가 증가해 1월 수주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금액인 1조 5,416억원을 기록함.

■ 세부 건축공종 대부분 호조, 토목공종에선 철도, 치산치수, 기계설치 부문에서 수주 증가

- 건축수주를 세부 공종별로 보면 ‘공장 및 창고’ 수주가 소폭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두 자릿수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 ‘주택’ 수주와 ‘사무실 및 점포’ 수주는 각각 전년 동월 대비 18.3%, 296.0% 증가함.
  - ‘공장 및 창고’ 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0.6% 감소한 3,057억원으로 작년 1월과 비슷한 부진한 모습을 보임. ‘관공서’ 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82.8% 증가한 5,287억원을 기록
- 토목수주의 경우 ‘도로 및 교량’, ‘토지조성’, ‘상하수도’ 수주가 부진한 반면, ‘철도 및 궤도’, ‘치산치수’, ‘기계설치’ 수주가 증가함.
  - ‘도로 및 교량’ 수주는 전년 동월비 69.0% 감소, 작년 11월부터 3개월 연속 감소세 지속
  - ‘철도 및 궤도’ 수주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수주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8.0% 증가한 3,801억원을 기록함.
  - 4대강 사업으로 ‘치산치수’ 수주 또한 호조(2,453억원, +868.7%)를 보임. 작년 4월부터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9월 이후 꾸준히 2,000억원 이상의 수주를 지속함.
  - ‘토지조성’과 ‘상하수도’ 수주는 각각 전년 동월 대비 78.5%, 14.6% 감소함.
  - 한편 ‘기계설치’ 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55.6% 증가한 3,523억원을 기록, 4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섬. 경기회복으로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남 지역에서 수주가 증가함.

〈주요 세부 공종별 수주액 및 증감률〉

(단위 : 십억원, 전년 동월비 %)

구분	건축					토목					
	주택	사무실 및 점포	공장 및 창고	관공서	기타	도로 및 교량	철도 및 궤도	치산치수	토지조성	상하수도	기계설치
2010. 1월	2,638.2	1,110.2	305.7	528.7	118.5	404.7	380.1	245.3	81.9	97.3	352.3
증감률	18.3	296.0	-0.6	82.8	11.0	-69.0	208.0	868.7	-78.5	-14.6	55.6

자료 : 통계청

박철한(연구원.igata99@cerik.re.kr)

## 건설산업선진화방안 1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

– “필요성 공감하나 구체적 실행에 미흡, 범정부 차원에서 지속 추진해야”

### ■ 실행 가능 과제 도출관련 법령 개정 등 다각도의 추진방안 마련

-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는 건설산업선진화방안(비전 2020)을 수립하여 2009년 2월 정부에 제안. 국토해양부는 이를 근간으로 선진화방안을 수립하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한바 있음(2009년 3월).
- 선진화방안은 발표 이후 1년간 다각도로 추진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음.
  - 건설산업의 선진화가 정부 부처 단독으로는 진행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 범정부 기구 성격을 지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건설산업선진화의 필요성을 국정 최고책임자와 공감
  - 선진화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 및 산업 내 기반이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제도의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행 가능한 과제를 도출하여 개선 의지를 보였음.
  - 건산법, 건기법, 국제법 등 관련 법·령·규칙을 제정 및 개정하는 등 관련 부처에서 건설산업선진화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였음.
  - 선진화방안의 세부 시행방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시범사업에 적용하는 한편, 확대된 재량권에 상응하는 공공 발주기관의 역량 강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발주자 협의회를 발족하여 운영하였음.

### ■ 개별 부처 중심의 단기 추진으로 한계성 드러나

- 그러나 건설산업선진화방안을 추진하는데 있어 몇 가지 한계점을 노정함.
  - 대책의 실질적인 성과보다는 법·제도 개선을 성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았고, 중장기적인 산업 혁신보다는 단기 현안 중심의 제도 개선에 치중한 면이 있었음.
  - 법·제도 중심의 선진화보다 발주자 재량권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발주자 중심의 선진화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추진 과정에서 발주자 역할 및 책임 강화보다 법·제도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한계성이 나타났음.
  - 범정부 차원에서 다뤄지기보다 개별 부처·해당국 중심으로 선진화 과제가 선택되고 추진되어 노력에 비해 효과와 효율성이 나타나지 않음.

- 선진화방안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사령탑 성격의 기구가 설립되지 못해 선진화방안 추진의 일관성과 지속성 상실. 정부 부처 간 공감대 형성 부족으로 협력성과 협조성 상실. 부처 및 이익집단 간 이견 발생시 조정 주체 부재의 문제 발생
- 제안된 선진화방안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한 실제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성과를 측정·평가하여 대책을 보완하는 체계적인 후속조치가 미흡하였음.

#### ■ 범정부 차원의 추진기구 통한 지속 추진이 바람직

- 건설산업 선진화는 제도의 개선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으며, 건설산업 시스템 전반의 혁신이 필요하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 이에 당초 선진화위원회가 제시한 건설산업 시스템 혁신을 위한 중장기적 성격의 개선 방안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선진화방안의 지속성과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설산업 혁신을 주도할 범정부 차원의 추진 기구가 필요함.
  - 초기에 실행력과 집행력을 가지려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므로 정부와 민간 합동 형태의 기구로 구성
  - 향후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민간의 역할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전환
- 선진화방안에 대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선진화방안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미리 설정한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동일한 지표를 통해 주기적으로 성과를 측정하고 관리하여 건설산업의 혁신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평가하여야 함.
  - 선진화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성과와 연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못한다면 이번 선진화 방안도 이전의 개선방안처럼 일회성에 그칠 수 있음.
- 건설산업의 선진화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회성 행사로만 방치할 경우, 또다시 선진화방안이 반복되는 비효율성과 비경제성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됨.

장철기(연구위원-ckchang@cerik.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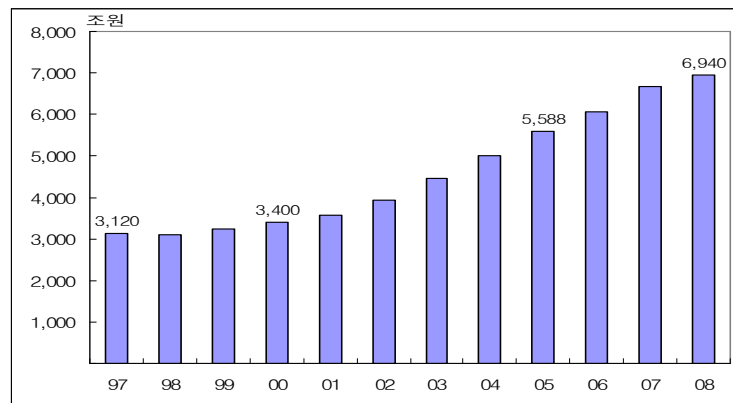
## 건설산업, 국부 형성에 최대 기여

- 우리나라 총 국부의 38.7%에 해당하는 2,700조원의 자산가치 창출 -

### ■ 2008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국부 규모는 GDP의 6.8배

-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08년 말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국부 규모는 총 6,940조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GDP의 6.8배에 달하는 수준임.
- 1997년에 3,120조원이던 우리나라의 국부는 IMF 외환 위기로 2000년대 초반까지 담보 상태에 머물렀으나, 2002년 이후 경기 회복에 따른 투자심리 회복과 자산가격 상승으로 지난 10년 간 국부 증가 속도는 연평균 7.5%를 기록
- 최근 국부 증가는 고정자본투자 증가보다는 토지자산 등의 가치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 2002년 이후 유형 고정자산의 연평균 투자 증가율은 8.5%인데 반해 토지 자산의 가치 증가율은 평균 11.9%로 나타남.

〈국부 증가 추이〉



### ■ 토지 및 유형고정자산이 전체 국부의 대부분을 차지

- 자산 형태별 구성을 보면, 토지가 3,265조원(47.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유형 고정자산이 2,972조원으로 42.8%를 차지해, 양자의 비중이 전체의 89.8%로 압도적임.
  - 그밖에 채고자산(6.0%), 내구소비재(2.6%), 무형 고정자산(0.6%), 지하자산(0.6%) 및 임목자산(0.3%) 순으로 나타남.

- 유형고정자산은 주택, 비주택 등 건축물과 토목시설물, 그리고 운수장비, 기계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건설 시설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

#### ■ 건설생산활동의 국부 형성 기여도 매우 높아

- 유형고정자산 중에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 그리고 토목 건축물 등 건설 시설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82.0%로서 압도적임.
  - 건설 시설물의 경제적 가치는 총 2,437.9조원으로 전체 국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1%에 달함.
- 택지조성 공사 등의 건설 활동에 의한 토지자산 가치 증가는 252.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됨.
- 건설 시설물 구축과 대지조성 등을 통하여 건설산업은 우리나라 총 국부의 38.7%에 해당하는 2,690.0조원의 국부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됨.

〈건설산업의 국부 형성 기여도 추계〉

(단위 : 조원, %)

자산 유형	건설산업 기여분	국부 총액 대비 비중
건 축 물	1620.7	23.3
구 축 물	817.2	11.8
대지조성	252.1	3.6
합 계	2,690.0	38.7

- 토지나 지하자원 등 비생산자산을 제외하고 산업활동에 의해 형성된 자산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건설생산활동에 의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69.7%로 추계되었음.

#### ■ 장기적 관점에서의 안정적인 건설투자 유지 필요

- 건설산업은 국부 형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보다 긴 안목에서 기본에 더욱 충실할 필요가 있음.
  - 스톡 증가에 의한 유지보수 투자 증가 등으로 보다 안정적인 투자 수준의 유지 필요

권오현(연구위원·ohkwon@cerik.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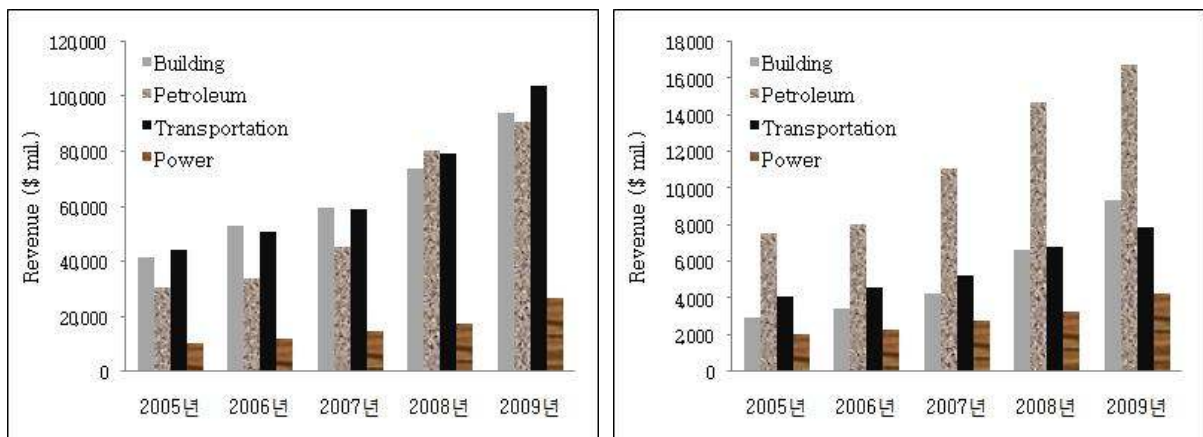
## “세계 건설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 수립 필요”

– 해외수주 상위 건설 및 설계엔지니어링업체 동향 분석\* –

■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2008~09년 간 외형적 매출은 여전히 증가

-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 간 해외수주 상위 건설 및 설계엔지니어링 업체들의 수익은 꾸준히 증가
  - 세계 225대 건설업체의 경우 건축, 플랜트, 교통부문 사업에 집중하였으며, 이들 부문에서의 수익은 평균적으로 전체의 81%를 차지
  - 건축, 플랜트, 교통 부문에서의 200대 설계엔지니어링업체 수익 또한 전체의 72.4%를 차지함.

〈최근 해외수주 상위 건설 및 설계엔지니어링업체 매출 실적(2005~2009년)〉



- ENR지가 집계한 수익은 당해 연도 매출에 의해 산정되므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는 2010~12년에 표면화될 것으로 추정
  - 세계 상위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별 포트폴리오 체계가 미흡한 국내 업체들은 선진 건설업체들의 2010년 이후 경영전략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최근 미국 및 유럽의 주요 선진 업체들은 건축, 플랜트, 교통 등의 사업에 대한 신수요 창출과 차별화된 경영전략에 주력함.

\* 본고는 2005~2009년 간의 ENR지 Source book 중심으로 재구성하였음.



## ■ 공공건축 수요 지속 증가, 석유교통발전 관련 사업 낙관적

- 건축 부문에서 학교, 병원 등과 같은 공공 시설물에 대한 재정 지원은 확대되고,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금융위기로 중동시장에 큰 타격은 있었지만, 세계 금융기관의 재정지원으로 두바이를 비롯하여 카타르, 아부다비,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시장은 2012년까지 여전히 수요가 활발할 것으로 전망됨.
- 교통부문은 과거와 달리 신성장동력으로 인식되어 각 국가별 재정지원정책과 함께 도로, 철도, 공항사업 등 신수요 창출에 경쟁이 가속되고 있음.
- 유가 변동으로 석유 관련 사업은 침체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비교적 적은 데다 2008년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선진 건설업체 들은 2010년의 전망도 낙관적으로 보고 있음.
-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에 의하면, 지난 4년 동안 글로벌 발전소사업에서 이산화탄소 방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원자력, 가스발전소 사업 계획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 국내 건설업체, 전문인력 양성 기반 및 선진국형 경영 체계 구축 시급

- 국내 건설업체의 2009년도 해외건설 수주액은 491억 달러로서, 지난 2년 동안 연평균 계약액인 483억 5,000만 달러보다 높으나, 주요 사업별 투입 가능한 전문인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임.
  - 글로벌 엔지니어 양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 구축이 시급하고, 국내 건설업체 들의 신속한 준비가 선결 과제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여전히 수요가 활발한 건축, 플랜트, 교통, 발전소 등의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선진국형 기업구조와 경영체계 구축이 필요
  - 세계 건설시장에서의 생존뿐만 아니라 해외건설 수주 상위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임.

유위성(연구위원·wsyoo@cerik.re.kr)

■ 주요 정부 부처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3.16	MB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BN ‘뉴스M’ 인터뷰에 두성규 건설경제연구실장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원건설 사태와 관련하여 최근 건설경기 침체의 원인과 건설업계의 파장, 주택·부동산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 제시</li> </ul> </li> </ul>
	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정책과 및 고용서비스정책과 주최 ‘건설근로자 실업급여 및 퇴직공제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 간담회’에 건설산업연구실 심규범 연구위원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 실업급여 지급 급증, 공제제도 피공제자 관리, 취업 알선망 정비 등 논의</li> </ul> </li> </ul>
3.17	국토해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최 자체 규제 심사에 건설정책연구실 박용석 연구위원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타워크레인 정비사업 관련)에 대한 심의 참여</li> </ul> </li> </ul>
3.19	한국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동향 점검 전문가간담회에 건설경제연구실 이홍일 연구위원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건설 및 주택·부동산 경기동향 및 건설업계의 재무현황 및 문제점 등 논의</li> </ul> </li> </ul>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선진화 TF’에 건설산업연구실 심규범 연구위원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 현장의 산업안전 개선 방안 논의 등</li> </ul> </li> </ul>

■ 발간물 현황

유형	제목	주요 내용
건설이슈포커스	건설노무제공자 도입요구와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상생방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건설노무제공자’ 도입을 요구하는 법안이 제출되었음. 건설노무제공자란 2008년 폐지된 시공참여자와 유사한 내용으로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li> <li>■ 부실 시공을 근절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1997년 도입되었으나, 실제로는 다단계 도급을 합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폐해가 불거져 2008년도에 폐지되었음.</li> <li>■ 팀, 반장에 대한 설문 결과 시공참여자체도의 도입으로 오히려 ‘부실시공이 증가’하고 ‘다단계 하도급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감소했다’는 응답보다 많음.</li> </ul>
	국부 형성에 대한 건설산업의 기여 및 지역별 인프라 스톡 추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발표된 국부조사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국부에서 건설 시설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었음.</li> <li>■ 2008년 현재 건설 시설물의 자산가치는 2,438조원으로 전체 국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1%인 것으로 조사됨.</li> <li>■ 건설 활동에 의해 이뤄진 택지 조성 등까지 포함하면 2,690조원으로 전체 국부의 38.7%를 차지</li> <li>■ 토지 등 비생산자산을 제외하고 산업활동에 의해 형성된 자산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건설생산활동에 의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69.7%로 추계됨.</li> </ul>

■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과정’ 개최

- 교육 일시 : 2010. 3. 24(수) ~ 3. 26(금), 총 3일간 24시간
- 교육 장소 : 건설회관 9층 건설산업연구원 연수실
- 교육 대상 : 건설업체 민간투자사업 실무자, 유관기관 및 단체 등

## 운(運)을 잘 관리하면 약(藥)이 된다

최근 3년간 국내 업체들의 해외건설 수주액 누계가 1,365억 달러에 달했다. 해외건설 수주액이 갑자기 늘어난 데는 기업들의 역량보다 해외시장의 환경 변화에 의한 영향이 더 컸다는 게 공통된 인식이다. 외부 환경 변화는 기업들이 관리할 수 없는 운(運)에 속한다.

해외건설 수주액이 급증한 기업들에게 공통된 이슈는 소화역량 제고다. 소화역량 중에도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 부족 문제가 핵심인 듯하다. 건설시장의 운은 방치해서는 안 될 관리 대상이다. 따라서 내부 역량을 제고시키는 단기 및 중기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국내 기업들이 선호하는 해외건설 인력은 경력 7~13년인 초임급 간부들이다. 1997년 IMF 때의 구조조정 영향으로 이 연령대의 인력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17년 이상이거나, 3년 미만의 인력그룹이 대세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인력 구조는 중간층이 보이지 않는다.

국내기업들의 해외건설은 대부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처럼 역량을 충분히 갖춘 공종별 전문공사업체가 없기 때문에 인력공급회사를 통해 기능공 혹은 기술자를 공급 받아 원도급계약자의 계획과 지도 아래 생산하는 직영방식이다. 현지 근로자 혹은 기술자들이 공사기획이나 공종별 기획 및 간접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되기 때문이다. 국내 몇몇 단체에서 해외건설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강의실 교육이 전부다. 국내 재교육기관들의 프로그램도 대부분 자격이나 등급을 유지하기 위한 법정이수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강의실 교육이라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길 원한다.

세계 건설시장에서 최강자 그룹에 속한 선진기업들은 일반적으로 경력 7년 미만의 기술자는 극소수로 채용한다. 시공생산보다 생산기획 및 조정업무가 주업무이기 때문이다. 직접 생산은 대부분 하도급이나 직영을 통하기 때문에 기업은 당연히 경력 7년 이상의 기술자 중심으로 채용한다. 국내는 대기업일수록 유능한 신입사원부터 확보하려고 한다. 최소 3년간은 현장을 통한 학습과정을 익히도록 하여 직무의 완성도와 지식을 넓혀간다.

중기적으로는 기업들이 경력 5년차 인력을 해외현장에 투입하여 2~3년간의 훈련과정을 거쳐 글로벌엔지니어로 육성하면 내부 인력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해외시장 진출 경험은 있으나 현재 운영 현장이 없어 인력에 여유가 있는 회사나 혹은 진출 준비를 해온 기업들의 인력을 해외현장에 파견하는 방안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국내 공공기관에서 흔히 사용하는 기관 대 기관 간 인력공유제를 민간기업에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 해외건설 물량을 소화하는 데 있어 급한 불길을 잡아야 할 때가 됐다. <건설경제, 2010. 3. 11>

이복남(연구위원·bnlee@cerik.re.kr)